

모두 함께 세상을 따뜻하게 가꾸는 노력, 정치후원금

기고

노재훈

전라남도선거
관리위원회 주무관



후원금은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을 후원하고자 하는 개인이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후원회에 기부하는 '후원금'과 정치자금법을 정당에 기부하려는 개인이 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하는 '기탁금'으로 구분된다.

'후원금'이라 함은 후원회에 기부하는 금전이나 유가증권 그 밖의 물건을 말한다. '후원회'라 함은 「정치자금법」에 의하여 정치자금의 기부를 목적으로 설립·운영되는 단체로서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단체를 말한다. 후원회 제도는 정치자금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직접 받을 경우, 제공자와 제공받는 자 간에 각종 비리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별도의 기구를 통하여 정치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기탁금'이라 함은 정치자금을 정당에 기부하고자 하는 개인이 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하는 금전이나 유가증권 그 밖의 물건을 말한다. 기부된 기탁금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일정한 요건을 갖춘 정당에 배분·지급한다. 기탁금 기부도 후원금 기부와 마찬가지로 세액공제 혜택이 있으며, 후원회 기부가 불가능한 공무원이나 사립학교 교원도 기부할 수 있다.

정치후원금 기부는 정치후원금센터

(www.give.go.kr)에서 카드결제(카드포인트 사용가능), 휴대폰 결제, 계좌이체, 카카오페이·페이코 간편결제 등 다양한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이 중 카드 결제를 이번에 한번 해 보았다. 기탁금 '기부하기' 메뉴를 클릭했다. 개인정보 이용동의를 하고, 본인인증을 했다. 휴대전화번호 등을 기입하고, '직업'으로 '공무원'을 선택했다. 기탁금액 입력 이후 연말정산 간편 신고 신청동의 등을 하고, 다음 단계로 넘어갔다. 입력한 기부자 정보를 재확인하고, 결제수단은 '신용카드 결제'를 선택했다. 이렇게 기탁금을 기부했다.

크리스마스 케이크 초 하나에 붙인 불은 다른 초에 나누어도 사라지지 않는다. 작은 불을 나누고 나누어, 크리스마스 케이크 위 모든 초가 켜졌을 때 더 밝고 따뜻해진다.

정치후원금도 이와 비슷한 것 같다. 정치후원금을 기부하면 연간 10만원까지는 기부한 금액 전액이 세액에서 공제되고, 10만원 초과 금액은 일정 비율에 따라 추가공제되는 세제 혜택도 누릴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소액 다수의 기부는 많은 사람의 참여와 함께 큰 힘을 발휘하여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기 때문이다.

올해는 예년과 달리 추석연휴도 더웠는데, 11월 수능시험일까지도 별로 춥지 않았다. 기후변화가 현실로 다가왔구나 싶었다. 그런데 최근 일교차가 급격히 커지더니 여봐란듯이 찬 바람이 매섭게 불고 첫눈까지 내렸다. 이제 겨울인데 이렇게 온난해도 되는가 하는 마음은 일순간에 사라지고, 다시 좀 따뜻해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시간이 흐르면 자연의 섭리대로 다시 따뜻해질 것이다. 그러나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기를 마냥 기다릴 수는 없다. 따뜻해야 살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모두가 맘 편히 따뜻하게 지낼 수 있는 건 아니다. 어려운 사람들이 있다. 이들을 위해 겨울마다 각종 기관·단체에서 연탄을 기부하거나 나눔활동을 하고 있다. 냉혹한 현실을 바꾸어 가는 건 따뜻한 후원인 것 같다. 정치후원금도 그러한 후원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

모두 함께 세상을 가꾸는 노력, 정치

사진으로 보는 세상



교보문고와 대산문화재단이 10일 서울 종로구 교보문고 광화문점에 전시 중인 노벨문학상 수상자 한강 작가 초상화를 서점 방문객이 사진촬영 하고 있다. 초상화는 전통 회화에 다양한 기법으로 약선을 담아내는 박영근(성신여대 서양화과 교수) 화가의 작품이다.

뉴스시

저센 국민의 탄핵요구, 더 이상 외면 안돼

社說

초당적 참여로 혼돈 끝내야

'비상계엄 사태'로 헌정을 유린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과 내란죄 수사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광주·전남은 물론이고 전국에서 거세다. 탄핵소추안 표결에 불참한 국민의힘을 성토하는 여론도 잦아 들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12·3 내란 사태가 일어난 지 벌써 일주일. 안개 속에 빠진 정국을 하루 빨리 정상화 시키기 위한 정치권의 초당적 협력을 촉구한다.

윤석열 정권 퇴진 광주비상행동은 지난 9일 동구 5·18민주광장에서 '윤석열 탄핵·구속, 국민의힘 해체 촉구 시민시국성회'를 열었다. 당초 광주비상행동은 매주 토요일 총궐기대회를 열기로 했지만 정부와 여당이 제시한 '질서 있는 퇴진'에 대한 국민적 반발이 커지고 내란 수사가 본격화되면서 이날부터 매일 밤 시국성회를 열기로 했다. 내란을 획책한 윤 대통령과 탄핵소추안 표결을 무산시킨 국민의힘을 규탄하는 지역 원로와 시민사회단체, 광주시·5개 자치구, 종교계 등 각 계각층의 반발도 커지고 있다.

지금 대한민국은 혼돈 자체다. 현직 대통령이 출구급지를 당하는 초유의 상황이 벌어졌지만 윤 대통령은 법적으로 여전히 국군통수권을 갖고 있다. 장관을 비롯한 인사권도 행사하고 있다. 여당 대표와 국무총리의 국정 공동운영 담화도 위헌·위법적 조치다. 당장 정치권은 한덕수 국무총리와 한동훈 대표의 담화를 두고 '야합이면서 무혈 쿠데타'라며 비난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 여기에 국민의힘도 공연했던 '대통령 조기퇴진'에 대한 로드맵을 내놓지 못한 채 내부 싸움만 벌이고 있다.

헌법을 유린한 윤 대통령도 문제지만 탄핵소추안 표결 불참으로 자신들의 정체성을 보여준 국민의힘은 비난 받아 마땅하다. 국민을 대변하는 국회의원이 정략에 따라 국민들의 탄핵요구를 외면해서는 국회의원의 자격이 없다. 오는 14일에는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2차 표결이 예정돼 있다. 여당 의원들은 이날 표결에 반드시 참가해 탄핵안을 통과시켜야 한다. 불안정한 정국과 무너진 헌법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은 탄핵을 포함한 대통령의 조기 퇴진 뿐이다.

대학병원 파행운영 누가 책임질 텐가

전공의 미달 의료계 붕괴 직전

광주·전남 주요 수련병원의 전공의(레지던트) 모집이 줄줄이 미달됐다. 10일 의료계에 따르면 내년도 상반기 레지던트 모집을 마감한 전날까지 총 105명(별도 정원 10명 포함) 모집 전남대병원에는 단 2명이 지원했다. 신입 레지던트 47명 모집 예정이던 조선대병원에는 지원자가 전무했다. 각각 13명과 6명 모집 예정이던 광주기독병원과 광주보훈병원 역시 최종 지원자 수가 목표에 크게 미치지 못했다.

의정 갈등이 별다른 해법 없이 10개월째 이어지며 고착화하면서 레지던트 1년차 수련 자격이 주어진 인턴들도 대부분 사직, 중도 이탈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특히 지난 3일 비상계엄 포고령 중 '전공의 등 의료인 48시간 내 미복귀 시 처단'을 명기하면서 수련의 모집 여파에 영향을 끼쳤다는 지적이다. 실제 의료계는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수괴'로 지칭하며 퇴진 집회에 나서고 있다. 전국 의대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

비)는 지난 8일 오후 서울 양재동 AT센터 앞에서 '의대교수 시국선언 대회'를 열어 의료 탄압을 규탄하고 윤 대통령 퇴진을 촉구했다.

대화의 여지가 남았던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서 조차 의사단체들이 모두 빠지면서 의료계가 정부·여당에 완전히 등을 돌린 셈이다. 이러한 분위기가 저조한 레지던트 지원율로 이어졌다. 전공의 지원자가 극소수에 그침에 따라 대학병원 파행 운영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의정 갈등이 10개월째 이어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 당시 발표된 '미복귀 전공의 처단' 포고령이 내부 반발까지 키웠다. 전공의 모집 미달에 앞서 지역 대학병원들은 전문의 집단 이탈까지 이어졌다.

지역 거점병원인 전남대병원은 224명, 조선대병원은 107명 규모다. 탄핵정국으로 국가 전체가 혼란에 빠졌다. 갈등 장기화로 인해 의료계도 붕괴 직전이다. 이미 국정 기능을 상실한 현 정부와 갈등은 무의미해 보인다. 의료계라도 의료 현장 붕괴와 의료 공백이 없도록 의료체계 안정화에 힘써주길 호소한다.

서석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12·3 비상계엄' 사태와 탄핵 정국에서 주도권을 쥔 '키맨'이었다. 집권 여당의 한동훈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회를 지켰다. 국회 만장일치로 비상계엄을 무효화시키는데 일조했다. 그 뒤 그의 말과 행동은 온 국민의 시선을 집중시켰다. 하지만 실망만 안겼다. 비상계엄 사태 직후부터 탄핵 무산 때까지 이어진 말 뒤집기는 성난 민심을 자극했다. 심지어 탄핵 불발 이후 한덕수 국무총리와 공동 회견을 통해 윤 대통령 조기 퇴진을 밝혔지만, 한 총리와 한 대표의 공동 국정운영을 시사하는 허무맹랑한 발언이었다.

한 대표의 계엄 선포 직후부터 탄핵 불발까지 거듭된 말 바꾸기는 윤 대통령에 이어 또다시 국민을 혼란에 빠트렸다. 3일 계엄 선포 직후 "위법하고 위헌적인 비상계엄 선포"라며 "국민과 함께 막겠다"는 그의 입장은 꼬박 하루도 가지 않았다. 날이 밝자 그는 한덕수 총리·대통령실·국민의힘 비공개 회동에 이어 윤 대통령을 만났다. 같은 날 밤 그는 국민과의 약속을 뒤집은 채 '탄핵 반대'를 당론으로 채택했다. 그는 지난 6일 오전 긴급 최고위에서 "대통령의 조속한 직무 집행정지가 필요하다"고 하루 전과 상반된 입장을 냈다. 한 대표가 이번 비상계엄 시 계엄군의 체포 대상이었다는 점을 많은 경로로 확인하면서 입장에 변화가 생긴 것이다.

탄핵안 표결 당일인 7일 오전 윤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

에도 한 대표는 "직무수행 불가능, 조기 퇴진"을 고수했지만 탄핵 표결시 국민의힘의 표결 불참으로 말이 아닌 행동으로 뒤집기를 했다. 한 대표의 계속된 말 바꾸기는 결국 탄핵 무산이후 멈춰 섰다. 한 대표는 말 바꾸기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8일 오전 한 총리와 공동 담화에서 "질서 있는 대통령 조기 퇴진으로 혼란을 최소화하겠다"며 "대통령 퇴진 전까지 총리와 당이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와 한 대표의 공동 국정운영을 시사하는 대목

이다. '2차 내란'이라는 더불어민주당의 반발은 당연한 것이었고, 여당 내부에서도 균열로 이어졌다. 이번 주 예고된 2차 탄핵 표결에 참여하겠다는 여당 의원들의 발언이 쏟아지고 있다.

시작부터 빼먹었던 한 대표의 구상은 '동상이몽'이 될 가능성이 크다. "고작 8표의 미끼로 대통령을 협박해 국정을 쥐겠다"는 홍준표 대구시장의 일침부터, "절대반지를 차지하려는 골룸 같다"는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의 거친 발언마저 수궁이 가는 상황이다. 과거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 당시 나경원 후보는 한동훈 후보를 두고 한말이 떠올랐다. 당시 나 후보는 "자기 이익을 위해서 당과 여권을 위협에 빠뜨리는 위험한 무면허 운전"을 한다"고 비판했다. 금배지도 없고 정치 경험도 부족한 한동훈 대표의 무면허 운전이 국민의힘을 나락으로 내모는 위기를 좌초하고 있다.

김성수 논설위원

全南日報	사장·발행·편집인 이재욱	논설실장 이용환	편집국장 박성원
민주주의 구현 진실보도 실천 지역개발 선도	대표전화 (062)527-0015 기사제보 (062)510-0331	경영지원팀 (062)510-0421 광고영업팀 (062)519-0710	
	편집부 (062)510-0412 취재1부 (062)510-0380 취재2부 (062)510-0394 정치부 (062)510-0340	문화체육부 (062)510-0351 온라인뉴스부 (062)510-0461 사진부 (062)510-0391	
www.jnilbo.com m.jnilbo.com	구독료 월 1만5천원 1부 800원	1988년 4월25일 등록번호 광주가-2호 (일간) 우편번호 61474 광주광역시 동구 제봉로 137	
	구독신청 (062)510-0471 FAX (062)510-0436	광고문의 (062)512-0100 서울지사 (02)725-8890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 독자 의견을 환영합니다 (e-메일) webmaster@jnilbo.com